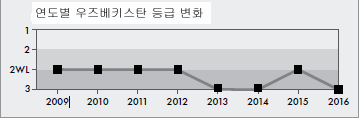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 3등급**

우즈베키스탄은 강제 노역의 대상이 되는 남성, 여성, 어린아이들, 그리고 성 매매의 대상이 되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공급원이자 목적지이다. 우즈벡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중동, 유라시아, 그리고 아시아에서 성 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윤락업소, 클럽, 그리고 개인 사택에서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즈벡 남성, 그리고 그보다는 낮은 비율의 여성들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건설업, 석유 산업, 농업, 소매업, 그리고 식량 산업 등에 종속된 채 강제 노역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 인신매매의 경우에는 나라 전반에 만연해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의 성인들의 강제 노동에 대한 요구는 매년 목화 수확 시기 때마다 일어나는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목화를 따기를 거부하거나, 대체 인력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또는 그들의 일별 할당량을 채우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적 편익에 있어서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거나 고용 중지, 또는 학대 등의 위협을 받게 된다. 몇몇 지역의 사기업들은 그들의 작업에 대하여 정부로부터의 감시 및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두려워 목화 수확에 자기 직원들을 동원하기도 한다. 독립 감시관의 보고에 의하면 2015년에 있었던 목화 수확 관련 작업들로 인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최소한 한 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14~16살 연령대의 소년들을 목화 수확 마지막 주차에 동원하는 일부 지방 관리들에 대한 단발성 보고가 있었는데, 이는 중앙 정부의 아동 노동 금지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대부분이 18살이지만 종종 17살짜리 학생들도 섞여 있는 4년제, 3년제 대학, 그리고 리시움(lyceum, 미국의 고등 교육 과정에 해당) 학생들을 강제 동원하는 일은 지금까지도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또한 몇몇 관리들이 공무원, 그리고 성인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목화 수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노동 조약 및 서약에 사인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독립 감시관의 주장에 의하면, 미성년자 인력의 감소가 있자 이를 충원하기 위하여 2015년에 강제 모집되는 성인 일꾼들의 수가 증가했다고 한다. 지방 관리들은 목화밭의 잡초 제거를 위하여 학교 직원 및 의료 인력들을 포함한 성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이들이 학교 선생, 학생(아이들을 포함), 사기업 노동자, 그리고 그 외 다른 이들을 공원, 거리, 건물들을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건설업, 목화 외 농업, 견직물 사업 등에서도 일하게 한다는 단발성 보고도 있었다. 정부 당국은 봄철 제초 및 가을 수확 현장을 감시하려고 했던 독립 활동가들을 괴롭히고 구금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는 학대하기까지 하였다. 최소한 두 명의 활동가들이 형사 고발 조치를 당했는데, 이는 그들이 목화밭에서의 노동 착취를 기록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한 보복성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기준의 충족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 정부 주도 하의 우즈벡 성인들의 강제 노동은 2015년 목화 수확에 있어서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중앙 정부는 지속적으로 농부들과 지방 관리들에게 도별 면화 생산 할당량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원 봉사자들을 끌어들이기에는 턱없이 낮은 면화 가격 및 노동 임금을 책정하여 대규모의 성인 노동 인력을 동원하는 한편 아동 노동의 숫자는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정부는 또한 목화 수확 현장을 감시하고 이를 기록하려는 독립 감시단들을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괴롭히고, 심지어는 구금하는 등 목화 농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 착취 건들을 은폐하기 위하여 더 많은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즈벡 정부는 이번 연도에 목화 수확에 관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와 협력 관계를 지속하였으며, 국제노동기구 직원들이 양호한 근로 국가 프로그램(Decent Work Country Program)에 근거한 노동인력 고용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우즈베키스탄 면화 생산량의 60퍼센트를 차지하는 우즈베키스탄 14개의 지역 중 11개의 지역에서 2015년 목화 수확 중 아동 및 강제 노동의 위험성에 대한 감시를 하도록 하여 세계은행(World Bank) 및 국제노동기구와의 협약을 준수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수확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의 실행을 통해 지난 5년 간 지속적으로 아동 노동의 사용을 크게 효과적으로 줄여 왔다. 2015년 목화 수확의 경우에는 정부가 목화 수확에 있어서 아동 노동의 사용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전국적 캠페인을 두 번째로 실행한 때였으며, 강제 노동에 대한 반대의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을 처음으로 실행한 때였다. 이에 더불어 우즈벡 정부는 세계 은행과 국제노동기구와의 협의 끝에 강제 노동의 종결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 플랜에 있을 다양한 절차들에 필요한 자금 공급원들 또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18살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대학교, 그리고 리시움(lyceum, 미국의 고등 교육 과정에 해당) 학생들을 2016년 목화 수확에서는 제하기로 하였다. 국가간 인신매매의 건에 관해서는 정부 당국이 인신매매 용의자들을 기소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위한 재활 센터를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또한 경찰, 판사, 그 외 다른 기관 관계자들에게 인신매매 특화 훈련을 실시하였다. 2015년 우즈벡 정부 당국은 타국 정부들과의 협력 하에 몇 가지 초 국가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권고 조치

매년 목화 수확 시기 때마다 발생하는 성인들의 강제 노역을 중단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 연간 목화 수확 과정 중 강제 아동 노역을 근절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 독립 감시관들이 목화 재배 현장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으로 허용할 것과 작업 현장 실태를 기록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박해, 구금, 그리고 학대를 중지할 것; 농업 분야에서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도입을 실행하여 현재 농부 및 관리들이 목화 수확을 위해 강제로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것; 선생, 의료 인력, 그리고 대학 및 라시움 학생들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아내어 지킬 것; 조사를 강화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시에는 인신 매매에 연루된 관리들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할 것; 학생들과 공무원들이 협박으로 인한 두려움 없이 목화 수확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 목화 수확의 경우를 포함하여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는 일을 강화하고 지속할 것; 반 인신매매 NGO들에 대한 지원과 정부가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할 것; 피해자들이 인신매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취하게 된 행동(불법 월경 등을 포함)들에 대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식별하는 절차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해당 절차들이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과 피해자들이 효과적으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 것;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라 인신 매매 용의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처벌

우즈벡 정부는 성적 그리고 국가간 이주노동 인신매매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법률 집행에 관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형법 135조는 성 매매와 강제 노동 모두를 금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들에 대하여 징역 3년에서 12년에 이르는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매우 높은 처벌 수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강간과 같은 다른 심각한 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와 맞먹는 정도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수사, 기소, 판결, 인신매매 및 그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선고 등에 관한 법 집행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다. 정부 당국은 2015년 인신매매에 관한 범죄들에 대하여 696건의 수사, 372건의 기소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같은 보고에 의하면 2015년 460건의 인신매매에 관한 범죄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이는 2014년의 583건이라는 숫자보다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442건의 기소가 징역형으로 이어졌으며, 15건은 교화 노동으로 결론지어졌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고 중 얼마나 많은 수가 도중에 집행정지 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내무부(MOI: The Ministry Of Interior)의 경우 인신매매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정부는 경찰, 판사, 그리고 그 외 다른 관계자들에게 인신매매 특화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타국 정부들과의 협력 하에 몇 가지 초 국가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목화 수확 및 다른 분야에서의 강제 노동에 있어서 공무상 공모가 있었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년도 인신 매매 범죄에 연루된 정부 관리들에 대한 어떠한 범죄 수사, 기소, 또는 판결 내용도 보고하지 않았다. 다만 강제 노동 법규를 어긴 7명의 관리들에게 행정적 조치상 벌금을 매겼을 뿐이었다.

보호

우즈벡 정부는 성적, 그리고 국가간 이주노동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식별하고 지원하며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목화 수확 분야의 강제 노동 피해자들을 돕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는 2015년 924명의 인신매매 관련 범죄 피해자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2014년 1,208명이라는 숫자보다 줄어든 수치이다. 이 924명의 피해자 가운데 140명은 국내에서 노동 착취를 당했으며, 나머지는 다른 나라에서 착취를 당한 우즈벡 시민들이었다. 시민단체들과 국제기구는 2015년에 774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확인하고 지원하였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4년에는 847명의 인신매매피해자들이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재외공관은 146명의 피해자들에게 여행 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이들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정부는 국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이들을 포함한 취약 계층 피해자들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또 그러한 피해자들이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경찰, 영사관 직원, 국경 감시인 같이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은 그러한 피해자들을 정부가 운영하는 보호소 또는 시민단체에 맡겨 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재활 및 보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그들이 소속된 지역 행정 관청에 범죄자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가 있은 후에 내무부가 해당 사건 수사에 나서고 피해자 각 개인이 공식적으로 “피해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정부는 약 4억 5900만 숨(16만 700달러에 해당)의 예산을 공식적으로 피해자 지위를 취득한 남성, 여성, 그리고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의 수도) 소재 인신매매 재활 센터 운영에 배정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2015년에는 503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이는 2014년의 369명이라는 숫자보다 더 늘어난 수치이다. 이 재활 센터는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소 거주, 의료, 심리, 법적, 그리고 구직 관련 지원을 담당한다. 때때로 피해자들이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 당국은 피해자들이 그들의 형사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센터에 남아 있을 것을 요구한다. 센터는 외국인 피해자들도 수용 가능하지만, 보호소가 설립된 이래로 실제로 그러한 경우는 없었다. 재활 센터는 2011년 이래 단 한 명의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도 수용하지 않았는데, 담당 관리의 보고에 따르면 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피해자들을 센터로 보내는 데 발생하는 교통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자들을 센터로 이송하는 일은 본래 인접한 지역의 의회가 담당하는 일이었다. 정부는 보호소 거주 서비스 외에도 피해자들이 경관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출두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였다. 정부는 지역 시민단체들이 피해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직업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세금 절감, 그리고 국유지 사용 등의 혜택을 주었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서비스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형사적 절차 밟기를 원하지 않아 정부가 운영하는 보호소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는 피해자들을 시민단체에 맡기기 때문이다. 국가간 성적 및 이주노동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것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시민단체의 말에 의하면 이들이 정부 당국에 그들의 피해자적 지위를 증명했을 때는 무혐의 처분이 된다고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영상 또는 서면을 통한 증언이 허락되지 않으며, 사건의 심리 진행 중 그들의 신상에 대한 비밀유지가 지켜지지도 않는다. 피해자들이 범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메커니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범인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재정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처지가 못 된다.

예방/방지

정부는 일꾼들에 대한 저임금 및 목표 생산 할당량 등을 포함하여 인력 동원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농업 정책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2015년 12월, 정부는 2020년까지 총 목화 생산 경지 면적을 13퍼센트 감소시키기로 공언하였으며, 2016년 1월에는 강제 노역 근절을 목표로 하는 농업 개혁안을 포함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도입하였다. 2015년 목화 수확의 때에는 정부가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목화 수확 현장에서 아동 노동의 사용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전국 단위 캠페인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행하였으며, 강제 노동에 대한 반대의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을 처음으로 실행하였다. 근로 감독관들이 목화를 따는 데 아동 인력을 동원한 혐의가 있는 7명의 관리들에게 벌금을 매겼으나, 정부는 그러한 아동 노동 착취 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관리들을 형사 고발 조치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중앙 정부는 농부 및 지방 관리들에게 국가가 지정한 면화 생산 할당량을 채우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의 성인 노동 인력 동원은 물론 산발적인 아동 노동 착취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즈벡 정부는 2015년 학교 선생과 의료 인력들을 목화 수확에 동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작업 현장에 기계화 시스템의 도입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러한 계획은 재정적인 문제 및 농부들의 수작업에 대한 선호로 인해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 2016년 3월, 우즈벡 정부는 대부분이 18살이지만 종종 17살짜리 학생들도 섞여 있는 3년제 대학, 그리고 리시움 학생들을 목화 수확에 동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2015년 정부의 허가 아래 국제노동기구는 농업 분야에서의 고용 활동에 관한 양적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특별히 목화 수확을 위한 목표 할당제 및 대규모의 인력 동원에 있어서 강제 노역이 가지는 위험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쳐 목화 수확 현장에서의 아동 및 강제 노동 실태를 감시하기로 한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와의 협약을 이행하였다. 감시 대상이 되는 지역은 세계은행의 지원 하에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곳이었는데, 이는 우즈베키스탄 목화 생산지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다. 우즈벡 정부는 세계 은행과 국제노동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노동법 위반 행태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2가지 피드백 메커니즘을 만들었다. 정부는 관련자가 250명에 달하던 7건의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서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독립 감시관들의 보고에 따르면 관련 문의 지원 센터는 언제나 연락이 가능하지 않았으며, 핫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 몇몇 이들에게는 국가안보기관에서 협박이나 위협을 가하였고, 만일 추가적인 노동법 위반의 사례가 보고되면 보고한 이들의 임금을 삭감하였다고 한다. 2016년 1월에는 정부가 2년에 걸쳐 이루어질 농업 분야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승인하였는데, 이 계획은 노동 시찰 및 노동법 위반 보고를 위한 피드백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농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꾼의 수 및 임금을 식별할 방법을 고안하며, 면화 생산 기준의 완화에 대한 실행 가능성 연구를 준비하는 일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반 인신매매 조직 위원회 네트워크를 통해 초국가적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2015-2016년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각 지방 정부에 대한 감사를 실행하고 지역 단위 위원회가 해당 내용에 관한 연수를 받도록 하였다. 정부 관계자들은 또한 국가간 성적 및 이주노동 인신매매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대규모의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에는 각종 행사, 인쇄 매체, 텔레비전, 그리고 라디오 방송 등이 이용되었으며, 정부 차원에서 종종 시민단체들로부터의 협력을 얻거나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식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상업적 성 행위 및 강제 노동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데에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외에도 우즈벡 정부는 자국 외교관들이 반 인신매매에 관련된 연수를 받도록 하였다.